

● 제32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북한의 러시아 파병 · 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1.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북한의 러시아 파병 · 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 안 자 : 김형재 의원 등 69명 공동발의
- 나. 제 안 일 : 2024. 10. 31.
- 다. 회 부 일 : 2024. 10. 31.
- 라. 의안번호 : 229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최근 국가정보원에 의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아울러 지난 23일 미국과 나토 역시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 · 태평양 지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북한이 포탄과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낸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참전 행위이며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임.

-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요소임. 이번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정찰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무기 기술 등의 전수에 합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군이 6·25 이후 본격적인 현대전 경험을 쌓음으로써 대남 도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동안 북한은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와 같은 도발을 자행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음. 게다가 최근에는 김정일이 직접 한반도 지도를 펼쳐 놓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대남 군사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대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 같이 협력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함.

나. 주요내용

-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북한의 이번 파병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참전 행위이며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 행위임. 게다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와 러시아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이 송 처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국회,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연합(UN)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과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보강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범국가적 차원의 협력과 대응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음.

2 결의안의 배경 및 타당성 검토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를 점령하고,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진격하면서 양국 간의 전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방대한 양의 군사 장비를 공급¹⁾하고, 지난 6월에는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해 ‘상호 안보 지원²⁾’을 약속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음.
- 이에 해외 언론들이 ‘러·북 직접적 군사협력’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달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하고, 특수부대 1,500명을 러시아로 1차 이송한 사실을 밝히며,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 2023.8월 이후 총 70여 차례에 걸쳐 1만, 3,000여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로켓 등을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분석(국가정보원 2024.10.18.)

2)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중 제4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참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함³⁾.

- 이후 미국 국방장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본 정부 등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글로벌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군사 정찰위성과 핵 잠수함 기술을 포함한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큼.
 -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세계대전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은 국제적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고 서방의 대응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위해 북한이 군을 파병하고, 무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이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위반(1718, 1874, 2270)임을 주장함⁴⁾.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금융·경제 제재와 함께 핵·미사일 등 무기 수출 금지 조치임.
 - 1874호는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 공급·제조·유지·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등의 금지 조치임.
 - 2270호는 핵·미사일 개발 교육을 막는 내용임.
- 우리 정부 또한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히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3)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2024.10.18. 국정원 보도자료).

4) 미국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2024.10.29.).

것을 표방함⁵⁾.

-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를 폭파(2024.10.15.)하고, 대남 오물 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국회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군사적 도발에 대해 규탄하며, 북한의 파병 철회와 우리 정부의 안보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음.

<국회 ‘북한 러시아 파병 및 군사적 도발’에 관한 규탄 결의안 현황>

의안번호 ⁶⁾	제안일자	제안자	진행사항(10.31.기준)
① 2204808	2024.10.21	나경원의원 등 22인	외교통일, 국방위원회 회부
② 2204821	2024.10.22	김건의원 등 16인	외교통일, 국방위원회 회부
③ 2205012	2024.10.29	김영배의원 등 28인	외교통일, 국방위원회 회부

- 따라서 본 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협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담당 연락처

02-2180-7688

5)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2024.10.22., 대통령실 브리핑).

6) ①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②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 ③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